

광주·인근 5개 시·군 “기후위기 공동 대응한다”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상생간담회... 환경회의 정례화 가뭄·폭염·홍수 등 대책 등 논의 온열환자 응급 체계 등 구축키로

대도시인 광주시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인근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원탁회의를 정례화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도 함께 풀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강영구 나주부시장, 박철원 화순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 물관리 행정당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정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뭄 관련 물관리 협력 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폭염·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맞서 공동대응 협력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일 광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광주 인접 5개 시·군 단체장,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가뭄 관련 중앙부처 공동 건의사업 등을 논의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기정 광주시장, 이상익 함평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강영구 나주부시장, 박철원 화순부군수. 광주시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자체별 현안을 공유하고, 이상기후로 일상화된 자연재난 위협 속에서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비상시 생활·농업·공업용수를 지자체 간 유연하게 이용하고, 유역 간 용수공

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주호~동북댐, 나주호~덕남정수장 연계 등 통합물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인접 생활권 지자체 간 가칭 ‘가뭄·폭염·홍수 등 기후위기 환경회의’를 통해 통합 물관리 뿐 아니라 온열질환자 응급체계 구축, 기타 기후위기 대응 등 장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50년 만의 가뭄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이미 2018년부터 폭염·홍수·가뭄 등 유례없는 기후위기가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뭄종합대책에 광주·전남이 주장해온 대책 대부분이 포함됐다”며 “기후위기 원탁회의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광주시, 청년 로컬창업 10개팀 선발

팀당 최대 1200만원 지원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광주시민회관에서 제4기 청년창업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청년창업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제4기 청년창업자 10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10개팀은 △자연친화활동 분야 1팀(아크노브) △로컬푸드 분야 2팀(레소나, 무아베이크샷) △거점브랜드 분야 1팀(주디마리푸드) △지역가치 분야 4팀(크리에이티브아트, 더플래너스, 늑대족

발, 리부띠끄) △지역가치제조 분야 2팀(시루, 리브르블랑)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창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요청 사항을 청취한 뒤 “성공창업을 바라는 청년들이 꿈을 키워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발대식 후 청년창업 소상공인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한 팀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애로사항 해결, 전문 컨설팅·멘토링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플라마켓도 열렸다. 플라마켓에는 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청년과 소상공인 50개팀이 참여해 판매, 체험,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했다.

김성수 기자

민주 광주시당 ‘日 오염수’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3일 광주송정역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병훈 시당위원장(광주 동남을)을 비롯, 송갑석 최고위원, 운영덕·이형석·이용빈·김경만 국회의원, 정문성 서구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 핵심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발언과 피켓 퍼포먼스, 구호 제창, 서명운동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특히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굴종외교가 이젠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일보산 수산물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훈 위원장은 “범국민적 반대에도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핵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일본을 옹호하고 있다”며 “일본의 방사능 핵 오염수 투기를 합리화시켜주는 등 투기위원단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주권과 국익은 내준 것도 모자라 안전과 건강마저도 내주려는 윤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시민과 당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투기와 수산물 수입반대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위원회별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1인 피켓시위 등을 통해 정부 규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혜나 기자

전남도, 벼 대체 전략작물 전환 5만5천ha... 전국 최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결과 전국 42%... 지원액 433억

전남지역 벼 대체 전략작물 전환 신청이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5133ha를 신청 받아 지원액이 433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에선 13만2240ha를 신청한 가운데 전남이 5만5133ha를 신청해 전국 42%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2만5157ha, 경남 1만1802ha, 경북 9185

ha, 충남 5208ha 순이었다.

작물별로 동계작물은 4만9052ha로 이중 사료작물이 3만5645ha, 보리·귀리 등 1만656ha, 밀 2751ha 등이었다. 하계작물은 콩 2402ha, 사료용 곡물 2909ha 등 총 6083ha로 집계됐다.

신청인 중엔 청년 농업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 청년농이 14%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40대 이하(3.8%)보다 3.7배 많았다.

이는 청년 농업인이 식량 자급률 향상과 미래 농업정책에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 전남도가 2030년까지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청년창업·정착, 문화·복지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은 콩·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작물의 적기 파종과 재배관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7월부터 9월까지 영농 이행 실태 등 점검을 통해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광주형 가사수당, 부모·자녀 돌보는 중장년층 우선 도입돼야”

광주여성가족재단 40~59세 적합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가 부모·자립 자녀를 돌보는 비경제활동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사수당 추진시 우선 지급 대상은 ‘부모·자립 전 자녀와 살면서 가사 돌봄을 전담하는 40~59세 비경제활동 인구’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기준 광주시 수당제도는 총 11개다. 지급 형태는 크게 부모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나뉜다.

재단은 지급 연령이 만 24세 이하 부모, 청년, 만 65세 이상 노인에만 한정돼 비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제도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 돌봄 범위도 ‘어린 자녀 양육’에 집중되면서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가구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단은 청소년 또는 자립 전 성인 자녀, 부모 모두를 돌보는 중장년층의 가사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재단은 해당 가구에 가사수당 지급시 해마다 5억~1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

산했다. 1년에 가구당 60만원, 120만원, 18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각 5억6000만원, 11억2000만원, 16억7000만원이 든다. 도입 근거로는 △광주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노인 돌봄시 ‘가사노동’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 △광주시 ‘가사노동 인식·실태조사’ 결과 시민 80.5%가 가사수당 제도 도입 찬성 △2022년 가사노동에 따른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미래 펜데믹 도래에 따른 가사노동 부담 등을 들었다. 재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사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성수 기자

전남도, 스마트공장 보급 ‘기초단계’ 참여 기업 모집

전남도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 혁신을 위한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다. 6월 말까지 기술성·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

획이다.

지원 유형은 ‘기초단계’로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이다.

또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을 기업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9일까지 서류를 갖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휴폐업 중이거나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문의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공모문을 확인하거나 전남테크노파크(061-729-2581~3)로 된다. 최황지 기자